

주간 통일정세

2014-49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북한 "남한, CIA 고문에 침묵...인권 비판 자격없어"(12/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조평통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술 신기자와 문답에서 CIA의 고문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빗발치지만 남한 정부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 고문에 대해 침묵하고 국내적으로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 통신은 또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이른바 '중북 콘서트'를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괴뢰집권자가 우리 체도에 대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뢰당국이 파쇼악법을 휘둘러 마구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 北, DJ측 현대아산 23일 또는 24일 개성방문 요청(12/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를 인용하여,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이희호 여사 및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조의를 표시한데 대해 김양건 비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며,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측에 23일이나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 19일 요청했다고 보도함.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이 판문점 채널을 통해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며, "북측이 초청 대상을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올해 남북관계 경색은 남측 탓...대북정책 바꿔야"(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공보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바라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의지가 있다면 그릇된 대결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남한의 '대결정책' 탓이라며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조평통은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통일헌법 제정 준비 등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통일정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지금 괴뢰패당의 대북정책은 북의 변화와 붕괴에 기본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허황한 몽상'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어 "제반 사실은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통진당 해산결정 비난... "인권비판 자격 없어" (1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서기국 보도에서 현재의 결정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은 전대미문의 극악한 대정치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남조선은 악명 떨친 유신독재시대로 완전히 되돌아갔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평통은 "더욱이 격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탄압한 괴뢰보수패당의 치졸하고 비열한 망동"이라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극악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경고함.
- 북한, '애기봉 트리' 거둬 비난... "점등은 선전포고" (1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21일 '보도'에서 "박근혜 패당의 동족대결 야망의 산물인 '애기봉 점등식'은 우리 군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며 직접적인 선전포고"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사령부는 남측이 최근 애기봉 트리 행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애기봉 점등식은 종교행사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자극하려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주장함.
 - 사령부는 지난 10월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포격을 가한 사건을 언급하며 "남측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미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매체, 김무성 '북핵 공갈' 발언 원색 비난(12/2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미국 스탠퍼드대 MBA(경영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억제력을 폄하했다며 "우리 핵보유의 정당성과 거대한 의의를 깎아내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박지원 "北 대화재개에 강한 의지…빠라 걸림돌 거론"(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1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러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들과 북한으로 출경했다가 돌아온 박지원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남북 간 대화 재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였지만 대북 빠라 살포 중단 등의 조치가 있어야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주권사항"…南항의통지문 거부(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에 항의하기 위해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등 두 차례에 걸쳐 대북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고 16일 보도함.

- 이에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박지원 의원 방북 논평없이 보도(12/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일 동지 서거 3돌에 즈음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화환들을 보내왔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를 맞아 방북한 박지원 의원과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화환들을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또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이 보낸 조의문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전달됐으며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사의의 말씀'을 원동연 부위원장이 남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소개하지 않음.
- 민주평통 '北인권결의안' 반대 18개국에 인권 서한(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16일(현지시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중국, 쿠바 등 18개국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17일 보도함.
- 탈북자들 운영 자유북한방송 해킹 공격 받아(12/19, 자유북한방송)
 -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17일 새벽 이 방송 웹사이트에 2012년 8월 이후 게재된 기사들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북한의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글 등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19일 보도함.
 - 매체는 새로 게재된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도 포함되어 있으며, "서버 관리업체가 확인한 결과 해킹이 중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며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 북한 '남조선인권유린 보고서' 발표...인권문제 역공(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이하 협회)가 20일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유린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남조선인권유린조사 통보'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범죄, 청년 및 노인의 실업·자살, 군 폭행, 세월호참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등 올 한해 남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를 모두 남한의 '인권유린'사례로 비난하고 있다고 전함.
 - 보고서는 특히 유엔 산하 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미국 뉴욕타임스 등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자세히 소개하며 국제사회가 남한의 '인권유린행위'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우리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의 '북핵 및 인권 발언'(최대의 불안요인, 심각한 위협, 모순된 정책, 인권문제를 포함한 내부모순 등) 관련 세월호 침몰사건을 거론하며 '절망에 빠진 가련한 정신병자의 발광적인 몸부림'이라고 비난(12.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정부의 통일현장 제정 움직임은 '체제통일 야망의 뚜렷한 발로로서 동족대결 소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비난(12.16,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대자보(정규직 과보호 발언 등 비판) 관련 '반정부적인 대자보가 다시 등장한 것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인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는 괴뢰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고 비난(12.19,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인권 입력으로 비핵화 파탄...미국 책임져야"(1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가 파탄되는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함.

- 통신은 대변인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의 정보수권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점 등을 거론하며 최근 미국의 대북인권 압박은 2005년 6자회담으로 채택된 9·19 성명을 무시한 '노골적인 인권 대결 책동'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함.
 - 이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인권 대결전이 일정에 오른 오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덧붙임.
 - 특히 "(억류 미국인 석방은) 미국과 대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인권 대결전에 임하기 위해 진행한 청소작업"이라며 미국인 석방은 북미 간 대화를 염두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함.
- 북한, 장애인 인권문제 제기 영국의회 공청회 비난(12/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장애인 지원단체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17일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청회를 거론하며 "적대세력들이 장애자 문제까지 꺼들여(들고나와) 모략 소동을 벌이는 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를 꾸며내서라도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인권 압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한몫 보태보려는 너절한 시도"라고 주장했다고 전함.
 - 이어 담화는 "유엔 무대를 통한 반공화국 인권 광란극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이러한 후안무치의 모략품까지 고안해낸 것은 우리 제도에 대한 용납 못할 횡방이며 장애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비난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배경...핵포기 합의 무효"(1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0일 성명에서 "인권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될 수 없게 됐다"고 밝힘.
 - 이어 "핵 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핵 무력을 빠르게 강화할 것을 시사함.

- 또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독소 내용까지 들어있는 결의는 어떻게 해서나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추악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최고 표현"이라고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동참한 일본 또 비난(12/16,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6일 '과거범죄를 묻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을 규탄'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일본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특대형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함.
 - 논평은 "최근에 일본이 저들에게 쏘리는 국제사회의 눈길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공세에 합세하면서 망동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으로써 궁지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역전시킬수 없다"고 주장함.
 - 이어 "일본이 자기 특유의 간교성으로 과거범죄의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해 나설수록 국제사회의 대일 증오심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그것은 일본의 완전한 파멸로 이어질뿐"이라고 덧붙임.
- 북한, 일본 위안부 역사 왜곡 비난... "파렴치한 무리"(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당국의 미국 교과서에 기술된 위안부 기술 수정 요구는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 반동의 역사부정 책동이 무모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비난함.
 - 이어 신문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가 '동물'로 취급했다고 비난하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악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반동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무리"라고 강조함.
- 조선신보 "미국 쿠바 국교 봉쇄정책 실패 입증"(12/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9일 '메아리' 코너에 게재한 '역사적인 합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합의가 "미국의 대패, 쿠바의 대승리"라며 "조미(북미)관계와도 결부해 금후의 정세 추이가 주목된다"고 밝힘.

-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쿠바 봉쇄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역설한 데 대해 "마치 미국의 '무조건 항복' 선언처럼 들린다"고 평가함.
 - 이와 함께 신문은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공화당을 비롯해 남부 지역 초보수세력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까운 시기에 제재 해제를 비롯해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임.
- 북한, UN 인권결의에 '전쟁억제력 대응' 거듭 천명(12/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범죄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공세는 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에 의해 강압 채택된 '인권 결의'는 저들의 새 조선전쟁 도발책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2003년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전날 통과된 유엔결의 등에 비유함.
 - 신문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인권유린 만행을 짓부수지 못한 것은 그것을 파탄시킬 수 있는 군사적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미제를 주되는 공격목표로 정하고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미국 핵실험 재개론 비난... "세계비핵화 불가능"(1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미국이 있는 한 세계의 비핵화는 실현불가능하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의 핵실험 재개론을 언급하며 이는 "핵 우세에 기초해 세계제패 전략을 실현하려는 핵 광신자들의 망발"이라고 주장함.
 - 논설은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구상은 감축을 내세우면서 이면으로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는 '기만 전략'이라며 이 전략에 실증을 느낀 보수세력들이 비핵화 구상에 파산을 선고하고 노골적으로 핵실험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핵군비 경쟁을 촉발해 전 세계가 핵 위험 속에 놓일 것이라며 "미국이 있는 한 세계의 비핵화와 안정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안보리에 'CIA 고문' 안건 상정 거둬 주장(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가 15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의 유엔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소위 (북한의) '인권 문제'고 불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날조된 것으로 지역이나 국제적 평화·안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문 보고서 관련 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올리자고 거둬 주장했다고 16일 보도함.
- '김정은 암살' 美영화, 테러위협에 뉴욕 시사회 취소(12/16, 뉴욕타임즈)
 - 뉴욕타임스는 소니를 해킹한 자칭 'GOP'(평화의 수호자)라는 단체가 16일 "조만간 전 세계가 소니영화사가 제작한 끔찍한 영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세계가 공포로 가득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라"라고 위협했다고 전함.
 - 매체는 이어 뉴욕 랜드마크 선사인 시네마가 이틀 뒤인 18일 예정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뉴욕 시사회를 테러 위협으로 인해 취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 전문가 "북한 '스턱스넷'으로 사이버공격 가능성"(12/17, 38노스; 12/18, 연합뉴스)
 - 38노스는 제임스 루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 17일(현지시간) 38노스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스텍스넷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함.
 - 38노스는 루이스 연구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 "북한이 10년 전부터 사이버 공격 능력을 계속 키워왔으며 미국과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이란의 뒤를 잇는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 북한 내에 수천명이 해킹 공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 이어 북한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스틱스넷은 공항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파괴하기 위해 특수제작된 컴퓨터 바이러스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2011년 이란 핵시설의 핵심인 원심분리기들의 작동을 마비시키는 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8일 보도함.
- "미국, 소니 해킹 배후 북한에 신규제재 등 검토"(12/18, CNN)
 - CNN은 김정은 암살 영화를 제작한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결론을 내린 미국 정부가 소니픽처스를 상대로 한 해킹 및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테러 위협은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보복 조치로 신규 제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함.
 - 신호정보와 같은 여러 수단을 통해 그동안 해킹의 배후를 추적해 온 FBI는 이런 여러 증거를 토대로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굳혔다고 덧붙임.
- 북한, 미국에 '소니 해킹' 공동조사 제안...배후설 부인(1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이 터무니없는 여론을 내들리며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데 대처해 우리는 미국측과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누구든 한 주권국가에 감히 범죄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부터 명백히 내놓아야 한다"며 "우리는 미 중앙정보국처럼 고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이번 사건이 우리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방도가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소니의 영화 '인터뷰'의 상영이 테러 위협으로 취소된 데 대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려는 불순분자들을 절대로 그냥두지 않을 것이지만 보복하는 경우에도 영화관의 무고한 구경군들을 목표로 한 테러 공격이 아니라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과 그 본거지에 대한 정정당당한 보복 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미국은 우리의 공동조사 제안마저 거부하고 끝끝내 우리를 걸고들면서 그 무슨 대응 조치를 운운하는 경우 실로 엄청난 후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함.

마. 대중국

- 중국 정부 "김정일은 북한의 위대한 영도자" 평가(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주기(12월17일) 기념식을 하루 앞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3주기 기념식에 중국 측에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일 총서기(총비서)는 생전에 중조(중북)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고 16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친 대변인의 '북한의 조치를 존중한다'는 표현은 결국 북한이 중국에 김 위원장의 3주기 기념식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임.
 - 뉴스는 또 '최근의 북한정세를 평가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우리는 (조선과) 전통적인 우의를 다져온 이웃국가로, 조선이 발전하고 안정되고 인민 행복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류윈산, 주중北대사관 김정일 3주기 추도식 참석(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공산당 서열 5위로 중앙서기처 서기와 함께 선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7일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 중국, 북한에 김정일 추모 꽃바구니 전달(12/1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중국 공산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인 1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주조(북한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꽃바구니를 보냈다"며 "꽃바구니 댕기에는 '김정일 동지를 깊이 추억합니다'라는 글발이 쓰여 있었다"고 18일 보도함.
- 중국 지도부 "전통·우의 매우 중시"…북한에 메시지(12/18,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7일 오전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시진핑 동지가 총서기를 맡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조(북중) 전통·우의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18일 보도함.

- 통신은 이어 류 상무위원이 "중국은 북한과 함께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각도에서 출발해 중조(북중) 전통·우의를 잘 유지·보호하고 공고히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김정일 동지는 중조 전통·우의의 계승·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조화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바. 대일본

- 조선총련 건물 매각 결정에 북한 항의 안해(12/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 방송은 사실상 주일본 북한대사관 기능을 가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건물의 매각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예상과 달리 일본 정부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18일 보도함.
 - 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일본 법원이 조선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최종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을 전후해 북한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지 않는 등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 북한서 목격된 일본인 납북자 정보 100명 분 넘어(12/18, 교도통신;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18일까지 취합된 납치 피해자와 특정 실종자에 대한 북한 내 목격 정보가 100명 분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특정실종자'란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치 피해자와는 별도로, 일본에서 실종된 가족 가운데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18일 보도함.

사. 대러시아

- 러시아 북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협정 추진(12/15, 이타르타스 통신)
 - 이타르타스 통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15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할 '위험한 군사 활동 예방에 관한 협정' 초안에 서명하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북한 측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 보도함.

- 통신은 총리령 내용을 인용해 해당 협정이 두 나라의 양자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위험한 군사활동을 예방하는 한편, 양국 군대 간 모든 사고를 평화적 방법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어 '위험한 군사 활동'이란, 불가피한 상황이나 실수로 상대국 군대 인근에서 행해져 인명 피해나 물질적 손해를 일으키거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행동으로 협정 초안에 규정되었다고 통신은 전함.
 - 또 양측이 상대국 군대 주둔지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을 기할 것과 군사장비나 병력의 타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으며, 위험한 군사 활동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평화적 방법으로 수습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은, 내년 5월 러시아 방문 가능성**(12/17, 아사히신문)
 - 아사히신문은 외교 소식통 인용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내년 5월9일 열리는 대(對) 독일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초청했다며,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내년 5월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17일 보도함.
 - **북한, '김정일 고향'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방문기념비**(12/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러시아 하바롭스크 시(市)의 하바롭스크 우초스 전망대에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을 기념하는 표지비가 건립됐으며, 지난 16일 현지에서 제막식이 있었다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표지비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2001년 8월17일 하바롭스크시를 방문하시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전함.
 - **푸틴, 내년 5월 북한 김정은 러시아 방문 초청**(12/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초청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보도함.
 - 뉴스는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2차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 발송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북한에만 특별히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과 2차 대전 관련국들 모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유엔 안보리, 22일 북한 인권문제 다룬다(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라고 17일 보도함.
- '북한 인권'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에 북한 불참(12/19, AFP통신)
 - AFP통신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이 19일 "우리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안보리의 권한은 인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아일랜드, WFP 대북 식량지원에 3억원 기부(12/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 방송은 아일랜드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내년도 대북 지원사업에 31만 달러(약 3억 4천 만원)를 기부했다고 18일 보도함.
 - 방송은 아일랜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WFP를 통한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WFP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이번 기부금은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임.

- 美 反인종주의 시위를 거론, '자국을 인권옹호의 표본국으로 묘사하며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극악한 인종주의자, 인권교살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비난(12.15, 중앙방송)
- 콩고·나이지리아 대통령, 김정은에게 각각 조전(12.16, 중앙통신)
- 나이지리아 대통령·주북 경제 및 무역차사단·중국 대사관·유엔개발계획대표부 등 외국손님들·여러 나라 정당과 단체들, 12월 16일 만수대연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12.16,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60호(12.12),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평양호텔 등 6곳),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공장기계직장 등 9곳)' 수여(12.16, 중앙방송)
- 北국방위 정책국 성명(12.21)】 소니 픽처스社 해킹 관련 '평화의 수호자들이 단행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美연방수사국의 北소행실이 인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오바마대통령의 비례성 대응에 대해 '초강경대응전은 백악관과 펜타곤, 美본토 전체를 겨냥하여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및 '더 이상 남을 걸고들지 말라'고 경고(12.21, 중앙통신)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어린이식품공장 시찰...아동 영양지원 강조(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최룡해 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부부장과 함께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의 안내를 받으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방문해 어린이를 위한 영양 지원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공장을 둘러본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어린이 식료품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생산을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적대세력들은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며 "어린이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김정일 3주기 앞두고 백두산 천지 올라(12/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백두산의 절정 장군봉에 올라 천하를 한 눈에 굽어보셨다"며 그 시점을 "12월이 눈 앞에 다가오던 때"로 밝혀 그가 지난달 말 백두산에 올랐음을 시사함.
 - 신문은 "그이(김정은)께서는 백두산에서 새로운 출발의 포성을 울리셨다"며 "이 의미심장한 출발이야말로 (지난) 3년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총화이며 또한 장차 도래할 미래의 승리를 확고히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김정은, 방직공장 시찰...교복 생산 독려(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최룡해 노동당 비서,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명순 경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옷감 공장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방문해 학생들이 입을 교복 생산을 독려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염색종합직장'을 비롯한 공장 곳곳을 둘러보고 "학생 교복 천 생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학생 교복 문제를 푸는 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또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 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풀겠다"며 "공장에서 학생 가방용 천 생산에 필요한 기술 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아파트 붕괴 책임' 북한 최부일 두 계급 강등(5/18, 12/17, 조선중앙통신; 12/18,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5월 13일)와 관련하여 5월 18일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 소식을 전하고 '감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 책임자로 최부일 등 5명의 간부를 지적함.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를 맞아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소장 계급을 달고 김정은 黨 제1비서 뒤에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사진을 17일 공개했으며, 이에 연합뉴스는 지난 7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부장이 상장(별 셋)에서 소장(별 하나)으로 두 계급 강등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18일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김정일 3주기 중앙추모대회 거행(12/1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3주기 중앙추모대회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거행됐다고 이를 녹화 실황으로 중계함.
- 중앙추모대회에는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부인 리설주와 함께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룡해 비서,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박도춘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 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왼쪽 팔에 검은 완장을 차고 참가함.
- 중앙추모대회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의 개회 선언, 묵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추모사 낭독, 최룡해 비서와 황병서 총정치국장, 전용남 청년동맹 위원장의 결의 연설 순으로 진행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 옹위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거론하면서 "영토도 인구수도 작은 우리 조국을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우뚝 세워주었다"고 핵보유를 강조함.
- 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비서는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 결의연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만복의 씨앗을 온 나라에 떨쳤다"며,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함.

- 주중국 북한공관서도 '김정일 3주기 추도식' 열려(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를 맞아 오전 중국 곳곳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체류 중인 무역상들과 북한식당 종업원, 중국기업 채용 근로자들이 저마다 국화로 만든 꽃바구니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들고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단채로 북한의 총영사관과 영사사무소 등을 찾았다고 17일 보도함.
 - 뉴스는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관계자들도 조화를 준비해 북한 총영사관과 영사사무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고 덧붙임.
 - 이어 이날 김 위원장 추도식은 선양, 단둥 지역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시작됐지만,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의 경우 지난해보다 2시간가량 이른 오전 8시께 시작돼 30분도 채 안 돼 완료됐다고 전하며, 시끌벅적하게 치러진 2주기 행사에 비해 여러 모로 조촐한 느낌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소니 해킹' 북한 사이버전력, 김정은 시대 대폭 강화(12/20, 연합뉴스)
 -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2012년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력의 핵심인 기존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외에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추가해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정찰총국은 북한이 2009년 대외 공작업무를 총괄하고자 인민무력부 정찰국, 노동당 작전부·35호실을 통합해 만든 조직으로, 북한 사이버 전력의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 외에도 당, 군, 내각 산하에 다수의 사이버전 조직을 두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사이버전 인력도 김정은 시대에만 3천 명에서 약 6천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해커 부대는 전문적인 해커가 1천200 명을 넘어 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앞지른다는 평가도 있다고 뉴스는 덧붙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은 집권3년 정치적 업적은 장성택 처형"(12/1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12월 17일)를 앞두고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지난 3년 동안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도 아래 '선군 조선의 만년 토대'가 마련됐다고 분야별로 그의 업적을 열거함.
 -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김정일 黨 제1비서가 '일심단결'을 강화했다며 "2013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세하려 들던 현대판 종파(장성택 세력)들이 단호히 적발분쇄돼 당과 혁명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 더욱 순결해지고 백배해졌다"고 전함.
 - 이어 군사 분야에서는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며 "전투훈련과 싸움준비 완성에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하고, 작년 3월 당 전원회의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으로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을 영원히 수호하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임.
 -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인 2012년 12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를 '전인민적 대경사'로 꼽음.
 - 이 밖에도 보도는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설치,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서 창조된 '마식령 속도', 농업 분야의 유기농법 도입과 분조관리제의 성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 모란봉악단의 새로운 음악, 체육 열풍 등을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업적으로 나열함.
- '피눈물의 17일이 왔다' 김정일 3주기 특별방송 방영 (12/17,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은 17일 특별방송을 통해 북한의 간판 앵커이자,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중앙TV 특별방송으로 전달한 아나운서 리춘희의 추모사 낭독을 방영함.
 - 조선중앙TV는 1, 2주기 당시 아침 8시부터 방송을 시작한 것과 달리, 18일 새벽 0시 '피눈물의 17일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간판 앵커인 리춘희의 추모사 낭독을 시작으로 종일 방송을 시작함.
 - 리춘희는 추모사를 통해 "아버이 장군님(김정일) 정말 뵙고 싶다", "태양의 그 미소가 못 견디게 그림다"고 회고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노고로 "우리 조국은

위성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강조함.

- 조선중앙방송도 리춘히 앵커가 낭독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추모사를 18일 새벽 0시에 내보냄.

■ 조선총련, 김정일 3주기 맞아 김정은에 충성편지(12/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조선총련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자신의 귀중한 식솔이라고 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발언을 언급하며 "조직 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기층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충성을 다짐했다고 17일 보도함.
- 방송은 이어 조선총련이 "새 세대들에게 총련의 역사와 전통을 잘 알려줘 그들이 애국애족의 계주봉(릴레이 바통)을 튼튼히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며 대를 이은 충성 의지를 드러냈으며, 또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특색있게 기여하고 통일운동과 대외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벌이겠다고 결의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일 3주기 추모...새벽부터 주민들 참배 행렬(12/17, 조선중앙TV; 노동신문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새벽 2시20분부터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동상이 있는 평양 만수대언덕에서 북한 주민들이 참배하는 모습을 중계하며,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 이 새벽 12월의 추위는 맵싸도 가슴 속에 흐르는 그리움과 충정의 열도는 더욱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해설함.
- 노동신문은 17일자 신문의 6면을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글과 사진으로 6개 전면을 채움.
- 1면에 김정일 위원장의 대형 사진과 함께 그를 '백두산대국의 태양'으로 칭송하는 사설을 실었으며, 김 위원장을 '민족의 태양', '위대한 성인', '인간 중의 인간'과 같은 표현으로 극찬하고 그의 후계자인 "원수님(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강조함.
- 이어 2~3면에 실린 정론을 통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김정일 위원장 사후 3년 동안 '제국주의 열강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김 위원장의 '위대한 선군시대'에 이어 '위대한 김정은 시대'가 펼쳐졌다고 강조했으며, "원수님은 3대를 이어 조선민족이 맞이한 백두산장군, 불세출의 영웅"이라며 "이 하늘 아래엔 천년이 가고 만년이 흘러도 오직 하나 백두산혈통 밖에 없다"고 3대세습 체제의 당위성을 역설함.

- 또 4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6일 박지원 의원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 3주기 조화를 전달한 소식과 함께 조화 사진을 게재함.
 - 또한 연합뉴스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를 맞은 17일 오전 중국 곳곳에 있는 북한대사관과 총영사관에는 현지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들의 발길이 줄었다고 보도함.
- "북한, 내년 통 큰 외교전 펼칠 것"(12/1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8일 '2014년 정세 개괄, 조선의 전방위 외교와 6자 구도의 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년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라며 대화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내년에는 북한이 다양한 대화의 틀을 이용한 '통 큰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 '김정은 시대 도래...경제건설 촉구'(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자가 중앙양묘장,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 각종 현지지도에 함께 했던 사진들로 2면을 가득 채우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 탈상을 마친 후 아들인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집중 부각하여 김정은 시대를 빛내기 위한 경제건설을 촉구함.
 - 신문 1면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등극한 이후 황해도 은틀광산, 량강도 감자산지, 전국 화력발전설비 등에서 나타난 뛰어난 발전 성과들을 강조했으며, 4~5면에서 '공장현대화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거세찬 함남의 불길로 그날의 맹세를 지키자' 등의 글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제발전을 촉구함.
 - 신문은 또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 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전 발언도 큼지막하게 실었으며,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산업발전을 독려함.

- 김정일의 생애 마지막 현지지도(2011.12.9~10, 함경남도)를 거론하며 '김정일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야전열차에 있으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역사를 수놓아 왔다'고 칭송(12.16, 중앙통신)
- 「여맹」 일꾼들과 「여맹」 원들의 맹세모임, 12월 16일 최룡해(당중앙위 비서)·김정순(여맹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회관에서 진행(12.16, 중앙통신)
-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1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16,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이란 대사에 '강삼현' 임명(1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12월 18일 파키스탄 수상에게 '학교 테러사건' 관련 위문전문(1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숙(김정은 祖母) 출생(12.24) 97돌 경축 전국 풍경화 및 수공예품 전람회, 12월 16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12.19,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北 1인당 국민총소득 138만원, 南의 21분의 1(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통계청이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3년 기준)를 인용해 2013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8만원, 남한의 GNI는 2천870만원으로 나타나 북한의 GNI가 남한의 21분의 1에 불과하며, 작년(20.3배)에 비해 격차가 벌어졌다고 보도함.

- 북한 라선에서 만들어진 의류 한국서도 팔려(12/16, 38노스)
 - '38노스'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 프랭크 교수가 기고한 '북한의 미래일 수 있는 라선 경제특구'라는 글을 통해 라선 특구의 일부 지역에서 사진 촬영이 허용됐고 특구 안에 있는 '황금의삼각주은행'에서는 실제로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를 북한 화폐로 바꿀 수 있었다며 라선이 평양 같은 다른 지역보다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이었다고 전함.
 - 프랭크 교수는 라선특구 내 부두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에 임대된 곳에서는 크레인이나 연결 철도 같은 부대 시설이 최근 갖춰지기도 했다면서도, 철로에 녹이 슬 정도로 실제 물류 활동은 미미했다고 전함.
 - 이어 "라선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소도시보다도 뒤떨어지는 이유는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과 인권 문제 때문임이 명백하다"면서도 "많은 관측통이 북한의 이런 문제를 더 지속 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의 경제 개방을 꼽고 있다"고 덧붙임.

라. 대외 경제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지리정보체계에 의한 '산불피짐 특성해석방법' 연구완성 선전 (12.18, 중앙통신)
- 어랑천2호발전소(함경북도 소재) 준공식, 12월 19일 박봉주·오수용·로두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2.19, 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각종 뼈질한 치료제인 '불소피탄산 알약' 연구개발 보도(12.19,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투 등 성·중앙기관들에서 올해 양강도 감자산지들에 '농업생산건물 신축(78동: 감자저장고 15동·싹틔우기장 18동·알곡창고 16동·집집승우리 9동 등)' 선전(12.20,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김정은, 올 4월 외국문화 송두리째 제거 지시"(12/20, 마이니치신문)
 - 마이니치신문은 '노동당 내부 자료'를 인용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북한에 유입된 외국 문화와 오락을 "송두리째 제거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20일 보도함.
 - 신문은 올해 4월 작성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철저히 경계하고 단호하게 부수기 위해'라는 제목의 당직자 학습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우리의 내부에 침입한 이색적인 사상 요소는 베어낼 뿐 아니라 송두리째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함.
 - 또 학습자료에는 한국과 일본 등의 문화를 "사회주의 체도를 부식시키는 위험한 사상·문화적 독소"라고 비판하고 "방치해 두면 사회로 급속히 확산해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임.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역도산 증손자 북한서 유도선수 돼(12/15,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일본 프로레슬링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역도산 사망 51주기인 15일, 역도산의 딸 김영숙의 손자 류일훈이 북한에서 유명한 스포츠팀인 '4·25 체육단' 소속 유도 선수가 돼 주목받고 있다고 15일 보도함.
 - 이어 류 군은 현재 여자 역도 감독으로 활약 중인 역도산의 외손녀 박혜정의 아들로, 교도통신 취재에 "14살"이라면서 "역도산처럼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함.

- **북한 신세대 유행에 민감...성형수술로 외모 꾸며(12/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새 세대: 체제전환 혹은 체제수호의 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새 세대 탈북자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북한의 신세대는 생계가 아닌 유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성형과 미용에 관심을 두는 등 기존 세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행동과 생활 세계를 가꾸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15일 보도함.
 - 이어 김 교수는 북한 새 세대들의 유행이 김정일을 지칭하는 '장군님 스타일'에 치우친 점과 '김일성 휘장'이 패션이 되는 점 등을 사례로 들며, 새 세대의 소비 욕망이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자본주의적 개인의 징후라기보다는 이들이 국가와의 적당한 교섭을 통해 체제 유지에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뉴스는 보도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미 의회, 대북원조 계속 금지 … 인권·탈북자지원 강화 (12/15, 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대북 원조와 경제지원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3일 통과시킨 일명 '크롬니버스(Cromnibus)'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 예산안은 우선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어떤 자금이나 경제적 지원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음. 또 국무부에 대해서도 직접적 금융지원이나 배상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음. 금지된 금융지원에는 대부, 신용, 보험, 수출입은행의 보증 등이 포함돼 있으며 북한과 함께 쿠바, 이란, 시리아도 지원이 금지돼 있음.
 - 그러나 외교소식통은 "작년에도 대북 원조를 금지하고 탈북자와 인권개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세출법안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의회의 압박 강도와 행정부의 정책 집행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인권 압박으로 비핵화 파탄 … 미국 책임져야" (12/15, 연합뉴스)
 - 북한은 15일 미국의 인권문제 압박으로 6자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가 파탄되는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변인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의 정보수권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점 등을 거론하며 최근 미국의 대북인권 압박은 2005년 6자회담으로 채택된 9·19 성명을 무시한 '노골적인 인권 대결 책동'이라고 주장했음.
 - 특히 "(억류 미국인 석방은) 미국과 대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인권 대결전에 임하기 위해 진행한 청소작업"이라며 미국인 석방은 북미 간 대화를 염두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음.
- 러셀 "북미대화 주저 안해 ... 대북협상에 한국 포함돼야" (12/17,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가까이 직접 대화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 대화를 하는 데서 주저한 적이 없다"고 말함.
 -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중 공동과제와 협력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럼에도 한국이 한반도 미래의 직접적 당사자인 만큼 북한과의 어떤 과정(대화나 협상)에도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한·미·중 3국이 경제와 기업 등 투자자본뿐 아니라 인적자본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특히 3국이 음식과 영화, 스포츠, 음악 등 모든 분야에서 문화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함.
- 북한, 유럽의 CIA 고문 협력 비난 ... "피고석 신세" (12/18,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유럽 국가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활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음.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럽이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에 협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유럽 나라들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들고 다닐 초보적인 자격마저 상실한 제 처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음.
 - 최근 미국 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실태를 조사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테러용의자 이송, 비밀감옥 설치 등에서 미국과 협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대변인은 "유럽은 미국의 지휘봉에 고분고분 순종해 시중이나 들어주다가 함께 피고석에 물리는 노복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장선 것을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음.

- 미국 "소니 해킹은 심각한 안보 현안" ... 북한 지목엔 '신중' (12/1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상대로 한 해킹 및 상영 예정 극장에 대한 테러 위협은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밝혔다.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배후가 북한인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악의를 가진 정교한 집단에 의해 자행된 파괴 행위 사례로, 누구의 책임이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심각한 국가안보 현안으로 여긴다"며 "고위 외교·안보·정보 및 군 당국자들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놓고 매일 회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측이 해킹 당사자라거나 배후 조종을 했다는 의혹에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국가안보 담당자들은 이에 응당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그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자들의 의도가 종종 상대의 대응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미국에 '소니 해킹' 공동조사 제안 ... 배후설 부인 (12/20, 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미국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을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에 대한 북미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이 터무니없는 여론을 내돌리며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데 대처해 우리는 미국측과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북한의 반응은 미국이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응징 방침을 천명한 지 하루도 안돼 나온 것으로, 미국의 강경한 대응 방침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북미 대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본격 검토 (12/21, 연합뉴스)
 - 미국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에 대한 해킹사건과 관련, 북한을 테러 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임.

- 북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여러 가지 '비례적 대응' 옵션의 하나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결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우리는 나라와 동맹,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법에 따라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서열 5위 류윈산, 北대사관 김정일 추도식 참석 (12/17, 연합뉴스)
 -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7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류윈산 상무위원이 오늘 오전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기념활동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중국 최고지도부의 일원이자 공산당 권력 서열 5위인 류 상무위원은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겸하면서 선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중국 당국이 김 전 위원장의 3주기 추도행사에 최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냉각된 북중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한 측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 친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정일 총서기는 생전에 중조(중북) 간의 전통적 인 우호·협력 관계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서 김 전 위원장을 "조선당(노동당)과 국가의 위대한 영도자"라고 평가했다. 친 대변인은 북중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북한 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양국 관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중국 "'북한인권 ICC 회부'는 문제해결에 도움안돼" (12/19, 연합뉴스)
 - 중국정부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18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인권문제를 이용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안보리는 인권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은 안보리에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국가 간에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문제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라. 일·북 관계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동참한 일본 또 비난 (12/16, 연합뉴스)
 - 북한은 16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참한 일본을 또다시 비난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과거범죄를 묻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을 규탄'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일본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특대형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이 논평은 "최근에 일본이 저들에게 쏘리는 국제사회의 눈길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공세에 합세하면서 망동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으로써 공지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역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일본이 자기 특유의 간교성으로 과거범죄의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해나설수록 국제사회의 대일 증오심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그것은 일본의 완전한 파멸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일본 위안부 역사 왜곡 비난 ... "피렴치한 무리" (12/19,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미국 교과서에 기술된 위안부 강제 연행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일본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당국의 위안부 기술 수정 요구는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 반동의 역사부정 책동이 무모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 신문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가 '동물'로 취급했다고 비난하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악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반동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무리"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일본반동들이 무릎을 꿇고 천백번 용서를 빌어도 우리 인민의 원한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역사 책동으로 일본이 얻을 것은 수치와 파멸 뿐"이라고 덧붙였다.

마. 러·북 관계

- 푸틴, 내년 5월 북한 김정은 러시아 방문 초청 (12/20,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김 제1위원장에게 2차대전 승전 기념식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이 발송됐는지를 묻는 이타르타스 통신의 질문에 "그런 초청장이 발송됐다"고 확인했음. 페스코프 비서는 그러나 더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은 "김 제1위원장에게 2차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 발송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북한에만 특별히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과 2차 대전 관련국들 모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바. 기타

- 반기문 "북한 인권 매우 심각 ... 고강도 개혁 필요" (12/16,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반 총장은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한은 인권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반 총장은 장성택 처형 등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에서 다수의 처형이 보고됐고, 북한이 2차 인권정례검토(UPR)에서 처형을 유예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음. 그는 "북한에서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제도 개혁과 경제체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반 총장은 또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에 참가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국제 인권체제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대화와 교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北유엔 차석대사 전격 교체 … ‘北인권결의안’ 문책 여부 주목 (12/18, 연합뉴스)
 - 북한내 유엔·국제통으로 꼽히는 북한 유엔대표부 리동일 차석대사가 최근 전격적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음. 유엔이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인권 관련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시점에서 유엔통인 리 차석대사의 교체는 일부에서는 다소 예상 밖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유엔의 한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최근 2주 전 리동일 차석대사가 전격 교체돼 북한으로 들어갔다"면서 "이미 후임자인 안명훈 차석대사가 뉴욕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리 차석대사의 전격 교체를 두고 유엔 외교가에서는 그가 유엔대표부에서 일한 지 5년이 된 '고참'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바뀔 차례가 됐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첫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교체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음.
 -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 (12/19, 연합뉴스)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했음.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음.

-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임.
-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 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음. 이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여야 대표, 리퍼트 美대사와 대일외교·사드 논의 (12/16,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각각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미국대사와 접견하고 양국의 대일외교와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했음.
 - 김무성 대표는 리퍼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동맹국가로서 한·일관계가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리퍼트 대사를 만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급격한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음.
 - 리퍼트 대사는 "미일 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거나 여러 지침을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나. 한·중 관계

- 정의장·장더장, 동북아평화 공동결의안 채택 공감 (12/17,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양국 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음. 정 의장과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인 내년에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했음.
 - 정 의장은 "내년이 종전 70주년이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며 "따라서 양국 의회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자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다고 최형두 대변인이 전했다.
 -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내년은 중국 역시 항일 전쟁에서 승리한 70주년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공동 성명이나 행사를 (양국이 함께)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정 의장의 제의에 대해 전인대 관공처(사무처)가 지금부터 준비해 한국 국회와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음.

- 시진핑 "한반도비핵화에 건설적 역할" ... 정의장 면담 (12/18,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추진하고자 건설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음.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을 예방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견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 또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함께 각 측에 설득하는 것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실질적 타결에 이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 "FTA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 빨리 교역 목표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시 주석은 "양자관계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기회를 이용해 양자면담을 더 갖는 것을 희망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한 양자관계 (강화를) 더 추진하고 공동 인식을 더 높여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한·중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 연구성과 실용화 목표 (12/18,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완강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베이징에서 '한중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 이에 따라 두 나라는 과학기술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규모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됨. 향후 3년 간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기획해 내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한 연구과제를 공모하기로 함.
 -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기술 이전 및 기술사업화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과 중국 화거하이테크개발센터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함.

다. 한·일 관계

- 한·일 국방차관급 대담 ... 日 "국방 교류협력 강화하자" (12/17, 연합뉴스)
 -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과 만나 한·일 국방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 백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일본의 안보정책 논의가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반영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함.
 - 도쿠치 심의관은 아베 정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국방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부는 전함.
- "한·미·일 3국 방위비밀공유각서 체결 임박" <닛케이> (12/18, 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방위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음. 세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감안,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양해각서(MOU)의 일종인 비밀정보 보호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리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일은 실무수준에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 논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 합의가 아직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국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내용에 국한될 것"이라며 "체결 시기는 진행과정을 보가며 사전에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 현재 한국·미국, 미국·일본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 군사정보포괄보호 협정 (GSOMIA)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 추진 문제가 여론의 반발을 야기함에 따라 무산됐음.
- "한국 F-35 전투기 정비거점 놓고 일본·호주 경쟁" (12/18, 연합뉴스)
 -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미국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의 정비거점을 놓고 일본과 호주가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8일 호주 국방분야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F-35 전투기 함대의 기체 및 엔진 정비를 호주가 담당할 것이라고 전함.
 - 호주 국영 ABC방송은 미 국방부가 호주와 일본을 아시아 지역 F-35 전투기 정비거점으로 선정했으나 한국은 가까운 일본 대신 8배나 거리가 먼 호주에 정비를 맡길 방침이라고 보도함. 방송은 한국과 일본의 오랜 경쟁 관계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분석함.
 -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정비를 위해 우리 전투기를 일본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F-35 전투기의 정비를 어디에 맡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함.
- 차대통령 "軍위안부는 과거 아닌 현재·미래문제" (12/19,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에 관한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며 "시급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정계의 대표적 친한파 인사인 마이클 혼다 (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접견, "미국을 방문한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20분 넘게 살아계셨는데 고령 때문에

지금은 55분만 살아계신다.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에 혼다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는데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아태 지역 화해를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과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최선의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중국, 미국의 對대만 군함판매 결정에 강력 반발 (12/19, 연합뉴스)
 - 중국은 미국정부가 최근 대만에 대해 군함 4척을 판매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거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음.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계된 것이며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음.
 - 또 대만에 대한 군함 판매는 "양국이 체결한 세 개의 공동성명과 어긋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8·17공동성명'(1982년) 정신에 어긋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고 덧붙였다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정부 간 왕래, 군사교류, 무기매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대만에 군함 4척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군함이송법안'에 서명했음. 이 법안은 미국 연방 하원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것으로, 올해 4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심사·승인만 남겨둔 상태였음.

- 미국, 북한 사이버공격 저지 위해 중국에 협조 요청 (12/21,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음.
 - NYT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미국이 이번 소니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비례적 대응'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차단 조치"라고 설명했다.
 - 북한은 해외 인터넷 접속을 대부분 중국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음. 다른 나라가 북한발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면 불가피하게 중국 통신망에 접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임.

바. 미·일 관계

- 미·일 '안보밀착' 강화 ... TPP 협상 탄력받을 듯 (12/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미·일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됨. 일단 친미 일변도의 외교노선을 추구해온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에게 '정치적 재신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양국의 밀월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임.
 -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미·일 동맹 현안들이 새롭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정치적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베 정권이 동맹현안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임. 안보적으로는 집단자위권,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이 미·일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이끌 양대 현안으로 꼽힘.
 - 무엇보다도 아베 총리가 한국과 갈등을 빚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더욱 우경화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커보임.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군대 위안부 문제 등에서 아베 정권이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협력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음.

-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내년 전반기로 연기 (12/19,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애초 올해 말로 합의했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시기를 내년 전반기로 연기한다고 19일 정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명의의 공동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가이드라인 개정 연기는 올 7월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을 반영한 안전보장 법제 정비 작업이 오키나와(沖縄)현 지사 선거와 중의원 총선 등으로 늦어졌기 때문이다.
 - 일본 측은 내년 4월 통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유사사태 발생 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정부 간 문서임.

사. 미·러 관계

- 러시아 외무 "미국의 추가제재 양국관계 손상시킬 것" (12/19, 연합뉴스)
 - 미국의 추가제재 가능성에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고 AFP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위협은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음.
 -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 서방 제재로 루블화가 폭락하는 등 러시아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임.
 - 한편 라브로프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조만간 관련국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해 대화로 현 사태를 풀어갈 의지가 여전히 있음을 내비쳤음.
- 오바마, 러 추가 제재 법안 서명 ... 당장은 적용 않기로 (12/1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나 이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에 따라 러시아 국영 기업 등을 즉각 제재하지는 않기로 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낸 성명에서 "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정부의 제재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전개에 따라, 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럴 상황이 온다면 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의회는 법안에서 러시아가 추가로 도발하거나 옛 소련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가스 공급을 줄일 경우 국영 에너지·방산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백악관 요청을 수용해 의무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유재량 사항으로 바꿨음.

■ 미국·캐나다, 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12/20, 연합뉴스)

- 지난 3월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 지역에 대해 미국이 무역·투자를 중단하는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인이 크림과의 무역은 물론 크림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재무부에 크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행정명령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러시아 정부는 서방국가의 잇따른 제재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러시아 외무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미 국무부 "러시아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긴밀조율" (12/2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초청한데 대해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이슈 전반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 정기적인 접촉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을 다룬 언론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으며 이어 "우리는 동맹국들과 러시아를 포함한 우방들과 함께 설득을 통해서건, 압박을 통해서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안보 위협에 대처하도록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앞서 푸틴 대통령은 내년 2차대전 승전 기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 중·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자. 중·러 관계

- 중국 "러시아의 위기극복 능력 신뢰" (12/1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러시아가 루블화 가치 폭락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것과 관련, "러시아가 현재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여전히 외화보유액이 많고 공공채무가 비교적 적으며, 풍부한 자원과 산업설비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러시아의 이번 위기가 중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비롯해 양국간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국제 관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현재 루블화 폭락 사태로 인한 악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속해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틀 내에서 필요할 경우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SCO 회원국들과 함께 경제협력 강화, 각국의 경제 구조조정 추진,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 모색, 공동 발전 및 안정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차대통령 발언 맹비난...“禍 청하지 마라”(12/15, 데일리NK)
 -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대결광신자들의 지겨운 녀두리'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핵문제와 '인권' 문제를 떠들며 반공화국 도발광대극을 연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음.
 - 또한 박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보낸 메시지를 언급하며 "인도적 상화의 악화'니 뭐니 하며 '인권' 문제를 걸고 우리를 마구 헐뜯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핵 억제력과 병진 노선을 걸고드는 것은 결코 새삼스럽지 않다"며 "괴뢰들 따위가 주절댄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방패, 핵보유의 정당성은 흐려지지도 않고 딴 길을 갈 수 없다"고 강변했음.

- 북한 "인권 압력으로 비핵화 파탄...미국 책임져야"(12/15,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인권문제 압박으로 6자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대변인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의 정보수권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점 등을 거론하며 최근 미국의 대북인권 압박은 2005년 6자회담으로 채택된 9·19 성명을 무시한 '노골적인 인권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했음.
 - 이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인권 대결전이 일정에 오른 오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함.
 - 특히 억류 미국인 석방이 "미국과 대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인권 대결전에 임하기 위해 진행한 청소작업"이라고 강조했으며,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논란을 지적하며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 제도를 전복하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몽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음.

- 북한, 안보리에 'CIA 고문' 안건 상정 거둬 주장(12/16, 연합뉴스)
 - 북한인권 문제가 내주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정식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문 보고서 관련 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올리자고 거둬 주장했음.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15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의 유엔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소위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불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날조된 것으로 지역이나 국제적 평화·안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음.
 - 이어 "최근 폭로된 미국의 CIA 고문 범죄는 세계 곳곳에서 잔혹하게 자행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CIA 고문 문제를 조속히 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대북 인권 비판론자들 연일 맹비난(12/16, 연합뉴스)
 - 북한이 인권문제 비판에 앞장서온 남한과 미국 인사들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음.
 - 대남선전용 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수잔 솔티의 정체를 까밝힌다'라는 시리즈물 첫 기사에서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를 비난했음.
 - 기사는 솔티 대표가 "탈북자들을 끼고 돌면서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현실을 왜곡했다"며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지원한 그의 활동을 혈똥었음.
 - 이 매체는 지난 12일부터는 '박선영의 정체를 폭로한다'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를 세 차례 내보내며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을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특히 이들이 작년 5월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한 것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 남측 정보기관에 고용된 '정치사기꾼'으로 매도했음.
 - 북한이 대북 인권단체장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이들의 인권문제 제기가 거짓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으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동참한 일본 또 비난(12/16, 연합뉴스)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6일 '과거범죄를 묻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을 규탄'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참한

일본을 또다시 비난했음.

- 이 논평은 "최근에 일본이 저들에게 쏘리는 국제사회의 눈길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공세에 합세하면서 망동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으로써 궁지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역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일본이 자기 특유의 간교성으로 과거범죄의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해 나설수록 국제사회의 대일 증오심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그것은 일본의 완전한 파멸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은, 어린이식품공장 시찰...“제품질 최상으로”(12/16, 데일리NK)

-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1, 2면에 걸쳐 김정은이 평양어린이식료공장을 방문해 어린이 식료품이 대량 생산되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어린이들의 영양지원을 강조했다.
- 김정은이 시찰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어린이용 두유와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김정일도 2001년 7월 현지지도 한 곳임.
- 김정은은 "공장 제품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린이 영양식품들을 대비·분석해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독려했음.

■ 북한, 장애인 인권문제 제기 영국의회 공청회 비난(12/17, 연합뉴스)

- 북한의 장애인 지원단체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17일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영국 의회 초당파 모임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공청회를 거론하며 탈북자들이 최근 영국 의회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인권 압박을 위한 '모략'이라고 비난했음.
- 담화는 "적대세력들이 장애자 문제까지 꺼들여 모략 소동을 벌이는 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를 꾸며내서라도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인권 압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한몫 보태보려는 너절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 또한 북한의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참가와 지난해 장애자보호법 개정 등 장애인 인권 개선 노력을 열거하고 "순수한 인도주의 성격의 문제까지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적대세력들의 추악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유럽의 CIA 고문 협력 비난...“피고석 신세”(12/18, 연합뉴스)
 -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활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유럽은 미국의 지휘봉에 고분고분 순종해 시중이나 들어주다가 함께 피고석에 몰리는 노복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장선 것을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음.
 - 이어 "유럽 국가들이 인권옹호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의 특대형 인권유린범죄를 국제무대에서 문제시하는데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럽은 과거를 '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유엔 北인권결의안 표결 앞두고 대남비방(12/18, 뉴시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과 질의응답에서 "지금 미국의 악명 높은 중앙정보국이 비밀감옥들에서 감행한 극악한 반인륜적인 고문만행의 실상이 날날이 드러나 온 세계가 물 끓 듯하고 있는데 유독 박근혜패당만이 미국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만행에 대해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상전의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놀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음.
 -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 "미국상전의 인권유린만행을 덮어버리고 정윤희 국정개입 사건에 쏠린 남조선민심을 탄 테로 돌려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교활한 흥심도 깔려 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괴뢰패당이 진정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있지도 않는 북 인권 나발을 불어대며 공연히 헛수고를 하지 말고 백일하에 드러난 미국의 인권유린범죄부터 문제시하고 망조가 든 집안 풀이나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북 '노동단련대' 수감자들 노예노동(12/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보안원들이 사적인 돈벌이를 위해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경범죄자들의 노동력을 사고팔고 있으며, 보안원들의 개인 돈벌이에 동원돼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던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얼마 전 노동단련대에서 풀려난 양강도의 한 주민은 "내가 수감돼 있던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체 수감자 133명중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헤산시 '노동단련대'에서 사망한 수감자들은 40명 정도에 이른다고 밝힘.
 - 11월에 사망한 수감자들은 헤산시 강구동 사금채취업자들에게 팔려나가 사금을 채취하던 중 토사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함.
 -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헤산시 '노동단련대' 수감자들은 갑산군 대봉광산에서 외화벌이용 중석을 캐는데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곳에서 채취된 중석은 도 인민보안국(경찰청)과 도 검찰소에서 중국에 톤당 중국인민폐 4만원을 받고 수출하고 있음.
 - 이 소식통은 이미 낮 시간에 광산에서 고된 노동을 마친 수용자들을 '노동단련대'를 관리하는 보안원들이 밤중에 몰래 불러내 불법적으로 중석을 캐내고 있으며, 보안원들은 몰래 캐낸 중석을 kg 당 중국 인민폐 30원씩 받고 밀수꾼들에게 팔아치우고 있다고 언급했음.
- 북한, '北인권결의안' 통과에 南 맹비난(12/19, 데일리NK)
-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추악한 식민지괴뢰들은 인권을 운운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는 제하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대답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 18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음.
 - 조평통은 "지금까지 남조선은 인권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생색을 내면서 '인권의 보편적권리'니 뭐니 하고 목청을 돋구어왔다"면서 "더욱 가소로운 것은 아무런 주권도 가지지 못하고 미국상전의 장단에 춤이나 추는 주제에 감히 동족의 '인권문제'을 걸고 히스테리적 광란을 벌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음.
 - 그러면서 "아무런 자주권도 없고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미국은 인권을 운운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면서 "남조선은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극악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매달릴수록 파멸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 '남조선인권유린 보고서' 발표...인권문제 역공(12/20, 연합뉴스)
 -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이하 협회)는 20일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유린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남조선인권유린조사 통보'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보고서는 주한미군 범죄, 청년 및 노인의 실업·자살, 군 폭행, 세월호참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등 남한 사회의 '인권유린' 문제를 비난했음.
 - 특히 유엔 산하 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미국 뉴욕타임스 등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자세히 소개하며 국제사회가 남한의 '인권유린행위'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남한 정부에 대해 "남조선사회를 이처럼 참혹한 인권폐허지대,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며 철면피의 극치"라고 비난했음.

- '북한인권'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에 북한 불참(12/20, 연합뉴스)
 - AFP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이 19일 "우리는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안보리의 권한은 인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안보리 회의에는 안건의 대상이 된 국가도 원하면 참석할 수 있음.
 - 김성 참사관의 발언은 안보리의 인권 관련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리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갖췄을 가능성도 점쳐짐.

- 북한, UN 인권결의에 '전쟁억제력 대응' 거듭 천명(12/20,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범죄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공세는 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의 인권 공세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
 - 신문은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화하려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처럼 만들자는 데 있다"고 하며, 증인으로 내세운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했음.

-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인권유린 만행을 짓부수지 못한 것은 그것을 파탄시킬 수 있는 군사적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미제를 주되는 공격목표로 정하고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배경...핵포기 합의 무효"(12/2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20일 성명을 통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경한다"며 인권을 구실로 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포기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 성명은 "핵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핵무력을 빠르게 강화할 것을 시사했음.
 - 또한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독소 내용까지 들어있는 결의는 어떻게 해서나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추악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최고 표현"이라고 비난했음.
- 북한, 통진당 해산결정 비난... "인권비판 자격 없어"(12/20,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서기국 보도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남한이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했다며 북한인권문제를 비판할 자격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조평통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송두리째 짓밟은 이런 자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떠들며 그 누구를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북한인권문제 비판 자격을 문제았음.
 - 또 "박근혜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끝끝내 강행한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통합진보당에서 당한 망신과 창피를 양값음하고 중복 색깔을 부각시켜 통일애국세력을 전멸시키며 야당의 집권을 막아보려는 불순한 기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정운회 국정개입 사건 등으로 촉발된 각계의 반정부 여론의 초점을 판 데로 돌려 막다른 통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 북한 인권

- 미 의회, 대북원조 계속 금지…인권·탈북자지원 강화(12/15, 연합뉴스)
 - 1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3일 통과시킨 일명 '크롬니버스(CRomnibus)' 예산안에는 미국 의회가 대북 원조와 경제지원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안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어떤 자금이나 경제적 지원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무부도 직접적 금융지원이나 배상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음.
 - 반면에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민주주의 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음.
 - 또한 전체 9억3천만 달러가 책정된 '이주자와 난민 지원' 예산의 일부도 북한 탈북자 지원과 중국내에서의 보호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방송활동 예산도 대북 방송에 활용하도록 했음.

- "남북대화와 북한인권문제 해결 병행 추진해야"(12/15, 연합뉴스)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15일 '분단체제와 인권문제'를 주제로 열린 'HK평화인문학콜로키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음.
 - 서 연구교수는 "분단 극복 노력 과정에서 축적되는 상호 신뢰가 중장기적으로 남한이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에 책임이 있는 자유권 침해의 측면에 한정해 바라보는 단순 시각을 경계하며 "북한 체제의 변화와 분단 체제의 극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자 현실 타당한 길"이라고 역설했음.
 - 아울러 최근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북한인권법의 대안으로 '남북인권협력법' 제정을 들며 "이는 북한인권을 협력적, 평화적, 호혜적 시각으로 접근하자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 與 "최적의 기회" 北 인권법 처리 촉구(12/15, 뉴스시스)
 -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임을 언급하며 북한인권법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 권 대변인은 "인류보편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에 우리만 숨죽이며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야말로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야당은 북한인권법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설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미국인 또 불법입북...평양서 미국 비난 기자회견(12/15, 미국의 소리)
 -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이 14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비난했다.
 - 미국의 'CNN'방송과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자란 29살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는 이날 오전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전을 벌인 미국 정부가 마피아나 다름없으며 미국의 선거제도가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국 체제를 맹비난했다.
 - CNN은 마르티네스가 북한 기자로 보이는 사람 여러 명이 앉아있는 회의실에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는 영상과 사진을 함께 내보냈으며, AP는 그가 현재 구금 상태는 아니며 베네수엘라 망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은 별도 성명을 내고 마르티네스가 클래퍼 국장 방북 이틀 후인 11월 11일에 입국했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 마르티네스의 어머니 패트리샤는 아들이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전에도 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미국으로 돌아온 후 캘리포니아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병원을 나온 아들이 집으로 오지 않고 인터넷 대출을 받아 중국행 비행기표를 샀다면서 중국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이 아들의 행방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 국무부 '불법 방북 미국인에 영사지원 할 것'(12/15, 미국의 소리)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인은 14일 미국인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영사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해당 미국인의 본국 송환 추진이나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면담 요청 여부, 정확한 입국 경위와 시기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어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 반 총장 "북한, 인권 위해 강도 높은 개혁 필요"(12/16, 미국의 소리)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함.
 - 반 총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에 참가하고 유엔 이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국제 인권체제와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 같은 조치들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도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에서 실시된 다수의 처형, 강제복송 후 처형과 고문 등 박해와 차별,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 등을 지적했음.
 - 반 총장은 북한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적 개혁과 경제체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함.
 - 또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제사회에 당부했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우려를 논의하면 보다 포괄적인 평가와 행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북한인권, 정치적 색 아닌 이성·양심으로 봐야"(12/16, 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대북전단과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북한인권 포럼을 개최했음.
 -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대북전단을 부정적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북 전단보다는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접촉과 협력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북한의 경계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유태성 대북풍선 활동가는 '대북풍선운동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논하면서 "대북전단은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천사의 무기이기 때문에 대북전단과 정치적 연결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대북전단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휴전선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전단지 내용도 좀 더 정제되고 객관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전단의 정치화를 우려했음.
- 오완호 인권행동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부가 남한 내 갈등을 묶어두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너무 많이 끌어 놓았다"며 "대북전단지보다 남과 북의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 외교부 북한 기자 인터넷 교육에 비판 잇따라(12/16, 미국의 소리)

- 국제 언론인 교육기관인 '툼슨재단'이 영국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 과정에 대해 북한 정권만 이롭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가자들에게 국제 기준에 맞는 인터넷 환경을 이해시키겠다는 게 영국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다각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
- '선데이 타임스' 신문 등 영국 언론은 14일 해당 교육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북한의 선전선동원을 양성하는 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음.
- 특히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은 외교부가 북한 정권의 공식 나팔수들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국에 있는 8백 명의 탈북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그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앤디 실버스터 영국 납세자연합 사무장 역시 선전선동원을 교육시키는 데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음.
- 영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을 위한 유럽동맹 (EAHRNK)'의 제임스 버트 씨는 소수 외국인과 일부 고위 인사들만 통제 하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교육 과정의 이득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함.
- 영국 외교부는 13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영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주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중요한 관여 가운데 하나라고 해명했음.

- 유엔 안보리, 내주 초 北인권상황 의제로 채택 전망(12/16,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이나 23일(현지시간) 북한인권 문제가 포함된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애초 의제 채택 논의는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의장국 차드의 유엔 일정과 다른 안보리 일정 등의 문제로 내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한국과 미국 등 10개 안보리 이사국은 지난 5일 '북한 상황'을 안보리 의제로 공식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으며, 의제 채택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북한 상황'의 의제 채택은 확실시되는 상황임.
 - 한번 안보리 의제로 한번 되면 최소 3년간은 안보리 의제로 인정돼 필요시 언제든지 안보리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에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해 처음으로 안보리 석상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유엔 총회, 북 인권 결의 강력 지지해야"(12/17,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유엔 인권 결의안에 유엔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촉구했음.
 - 국제앰네스티 뉴욕지부의 니콜 비에르러(Nicole Bjerler) 공보담당은 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의해 주길 희망하며 제3위원회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던 8개국 중에서 기니비소의 경우 2011년에 찬성을 했던 국가라며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희망했음.
 - 휴먼 라이즈 위치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지도자이며 그의 아들인 새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I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제3위원회

에서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한 나라들 대부분이 참담한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심각한 인권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계속 반대나 기권을 하더라도 북한인권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채택돼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한편, 미국 버지니아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도 지난 15일 19개 결의안 반대국 중 시리아, 이란 등을 제외한 16개국 유엔주재 대사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음.

■ 국무부 '북한인권, CIA 고문과는 다른 사안(12/17, 미국의 소리)

- 미 국무부가 중앙정보국(CIA) 고문 보고서 관련 문제를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올리자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북한인권 문제는 CIA의 고문 실태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밝힘.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와 어느 때든 인권 기록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말했음.
- 이어 CIA 고문 프로그램은 미국의 가치와 맞지 않아 이미 중단시켰다며, 북한과 그들의 암울한 인권 기록을 같은 맥락에서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음.
- 또한 북한의 주장은 자국 인권 상황이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독립 의제로 다뤄질 수 있게 된 데 따른 반응인 것 같다고 말했음.

■ 민주평통 '北인권결의안' 반대 18개국에 인권 서한(12/17, 연합뉴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16일(현지시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중국, 쿠바 등 18개국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보다고 밝힘.
-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18개국 유엔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인권 결의를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음.
- 국제사회에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함.
- 이어 우리 정부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하루빨리 북한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 유엔 총회 본회의도 통과(12/19, 연합뉴스)
 - 유엔 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음.
 -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음.

-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 채택 환영...개선조치 촉구"(12/19, 연합뉴스)
 -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음.
 - 정부는 "금년 유엔 총회 결의가 안보리에 의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음.
 - 또한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힘.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공청회 개최(12/19,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함.
 - 북한인권법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 중이어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북한인권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청주시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12/19, 연합뉴스)
 - 청주시의회는 19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제5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했음.

-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헌법 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북한인권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힘.
 - 또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북한 당국에 조치를 취할 것, COI의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외 체류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도 요구했음.
 - 시의회는 의원 12명의 서명으로 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국회,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낼 계획임.
- 중국 "'북한인권 ICC 회부'는 문제해결에 도움안돼"(12/19,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인권문제를 이용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안보리는 인권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고 말했음.
 - 그는 '중국은 안보리에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국가 간에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문제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왔다"고 밝혔음.
 - 또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ICNK, '北인권결의안' 환영 광고 美뉴욕 타임스퀘어 게재(12/19, 데일리NK)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은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하는 광고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게재한다고 밝혔음.
 - 이번 광고는 오는 22일부터 7일간, 타임스퀘어뿐만 아니라 뉴욕시 한인타운인 32번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인근의 42번가 등 3곳의 전화박스 광고판에 게재될 예정임.
 - 광고는 북한 내부 기자가 찍은 어린이 꽃제비 사진과 함께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인 '북한의 반인도범죄는 국가의 최고위급에 의해 제정된 정책에 의해서 수십 년간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음.

- 이번 광고에는 NK위치, 남북동행,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8개 북한인권 단체들이 참여했음.
- 정부 “北 외무성 성명 개탄…9·19성명 준수해야”(12/19, 연합뉴스)
 - 한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핵포기 합의 무효화 등을 주장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음.
 -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 외무성의 전날 성명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북한에게 9·19 공동성명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 이 당국자는 "북한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엄중한 총의가 반영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땅히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3. 탈북자

- 탈북자 덴마크서 북 소행 추정 테러 당해(12/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을 탈출해 덴마크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 남성이 현지 시간 17일 오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에 의해 난민수용소에서 습격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 지난해 3월 덴마크에 도착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수용소에서 대기 중이던 30대 탈북 남성 배준식 씨가 난민 수용소에 침입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하는 등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밝힘.
 - 아내 리은경 씨와 2012년 12월 북한을 탈출해 덴마크에 도착한 배 씨는 피습 당일 수용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복도에 나갔다 변을 당했음.
 -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난달 10일 북한이 갑자기 "용서해 줄 테니 기회를 줄 때 당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회유하는 한편, 외국인을 시켜 자신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11월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6차례의 위협을 받았다고 함.

- 배 씨는 덴마크 경찰에 신고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수용소를 4번이나 옮기는 것 이외에 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에 접촉했다고 밝힘.
- 배 씨는 자신과 아내가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현지인이나 공작원들이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해 위협적인 전화 메시지 이른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살해 시도를 계속해 매우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같이 탈출하다 북송돼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북한서 목격된 일본인 납북자 정보 100명 분 넘어"(12/18, 연합뉴스)
 -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는 18일 지금까지 취합된 납치 피해자와 특정 실종자에 대한 북한 내 목격 정보가 100명 분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이 단체의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목격된 정보 가운데는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 당시 13세) 등 납치 피해자 외에, 1972년 도쿄에서 실종된 이쿠시마 다카코(生島孝子·당시 31세) 등과 닮은 사람에 대한 직접 목격 증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음.
 - 목격자는 북한 전 공작원이나 탈북자로 확실성은 증언에 따라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 NGO, 북 지하교인에 생필품지원(12/1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기독교구호선교회(Christian Aid Mission)은 이달 말까지 북한의 지하교인과 북중국경지대의 탈북자들에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 단체는 북한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몰래 기독교를 믿는 이른바 '지하교회 신자'에 미화 100달러 상당의 지원품 꾸러미를 전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소한 1천명의 북한 지하교인에 지원품 꾸러미를 전달할 계획이어서 미화 수 만 달러가 지원품 구입과 전달 경비로 필요하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북한 내 지하교인이 회합하는 장소와 운영 자금을 지원해 왔다면서 식량과 건물 유지 등 한 시설 당 일 년에 약 5만 2천 달러가 든다고 덧붙였다.
- 룩셈부르크 정부, NGO 통해 10만 달러 대북 지원(12/17, 미국의 소리)
 - 룩셈부르크 정부가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룩셈부르크'의 대북지원사업에 8만 유로,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룩셈부르크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의 맥스 래미시 지원 담당 국장은 지원금이 카리타스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벌이는 식량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2- 3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래미시 국장은 내년에도 카리타스 룩셈부르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식량농업기구의 북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 등을 토대로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식량 지원 재개 여부를 가늠할 것이라 밝힘.

- 아일랜드, 내년 WFP 대북 사업에 31만3천 달러 기부(12/18, 미국의 소리)
 - 세계식량계획(WFP)은 1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WFP의 내년도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25만 유로, 미화 31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 이번 지원금은 내년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위한 것임.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6월 말까지 대북 영양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총 1억 3,7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12월 15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46%인 6,370만 달러임.

- 북민협, 대북지원 민간활동 정상화 촉구(12/18, 연합뉴스)
 - 국내 59개 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18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활동 정상화를 촉구했음.
 - 북민협은 성명에서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금과 같이 정치적 상황과 연동해 선별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8. 북한동향

-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타령은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노골적인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7.22, 중앙통신·노동신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 북한인권단체(물망초)의 라오스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 청소년들 기자회견(12.12, 평양) 대역 가능성 제기에 대해 '북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하여 국제무대에서 反北 모략소동을 확대하려는 치졸한 추태'라고 반박(12.14, 중앙통신·노동신문/거짓과 모략이 드러난데 대한 앙탈질)
- 남한에서 "인권유린 만행들이 계속 감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제기'는 "신성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12.14, 중앙통신·노동신문/유신의 후예, 살인마들은 인권을 부르짖지 말라)
- 불법 입북(중국 단둥→압록강건너 입북) 미국인(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 29세), 12월 14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입북 경위,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영향과 지배 강요·인권유린 등 맹비난 및 북한 식 사회주의' 찬양(12.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의 '북핵 및 인권 발언'(최대의 불안요인, 심각한 위협, 모순된 정책, 인권문제를 포함한 내부모순 등) 관련 세월호 침몰사건을 거론하며 '절망에 빠진 가련한 정신병자의 발광적인 몸부림'이라고 비난(12.15, 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광신자들의 지켜온 닢두리)
- 北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對北인권 압력 관련 중통기자 질의 대답(12.25)을 통해 '억류되었던 미국인들의 석방은 인권대결전에 임하기 위하여 진행한 청소작업'이라며 '미국은 공화국의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12.15,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反인종주의 시위를 거론, '자국을 인권옹호의 표본국으로 묘사하며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극악한 인종주의자, 인권교살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비난(12.15, 중앙방송/망신당하는 인권옹호의 표본국)

-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12.17)】 세계인권의 날을 계기로 영국 국회의 '北 인권상황청문회'(北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말살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12.10) 관련 '우리(北) 제도에 대한 용납 못할 희망이며 장애인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라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비열한 모략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12.17, 중앙통신)
- 유엔 '北 인권결의안'에 동참한 일본에 대해 '일본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특대형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이라며 '이를 외면하고는 그 어떤 다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12.16,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외무성 대변인, 12월 17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美 CIA 고문자행 연루 관련 '유럽나라들은 우리(北)의 인권문제를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대형 인권 유린 범죄를 국제무대에서 문제시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중통기자 대답(1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2.18)을 통해 우리 정부가 美 CIA의 테러용의자 고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 관련 '진정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있지도 않는 '北인권'에 헛수고하지 말고 미국의 인권유린범죄부터 문제시하고 집안 풀이냐 마로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1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